

의안 번호	1911	<b>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b> <b>심사보고서</b>
----------	------	---

##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4.(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2. 3. 4.(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2. 3. 21.(월)

##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김영환)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세부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로부터 구청장직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안 제4조)
  -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 위원회의 직원(안 5조)
  - 위원장은 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
  - 중구 소속직원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요청 가능
-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6조)
  -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함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료·정보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 요청
-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
- 수당 및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안 제7 ~ 8조)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 공개

####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05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옥범)

- 본 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부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 법령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 조례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